

# 건설소식

## 공사제경비율 상향 조정

### 조달청, 산재보험료 등 4개 항목

**정**부 시설공사의 공사비 산출 기준이 되는 제비율 적용기준이 일부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 복지비용 확대와 적정공사비 산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2007년 정부공사비 원가계산에 적용할 비용산출 기준을 확정,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조달청이 정부공사 공사비를 책정할 때 순수한 공사비에 추가하는 제경비 항목은 산재보험료 등 7개와 건설공사 추진에 필수적인 간접노무비 8개 등 모두 15개다.

이 중 2007년부터 적용요율이 오르는 항목은 전체 15개 가운데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기타경비 등 4개 항목이다.

조달청은 이와 관련, “시민단체와 건설단체에서 요구한 적정한 공사비 산정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며 “특히 건설근로자 복지와 관련된 보험요율과 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경비가 인상됨에 따라 향후 건설근로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목별 조정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근로자 복지와 관련한 산재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각각 지난해 말에 이뤄진 노동부 고시와 올해 초 건설교통부 고시를 반영,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 적용요율은 3.4%에서 3.8%로,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은 1.31%에서 1.40%로 높아졌다.

퇴직공제부금비 적용요율도 지난해 공제부금비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 것을 반영, 토목공사가 1.35%에서 1.89%로, 건축공사는 1.42%에서 2.03%로 올랐다.

특히 기타경비의 경우 토목공사가 공사규모와 공사기간에 따라 4.8%~6.7%까지 적용하던 것을 5.1%~7.1%로, 건축공사는 4.9%~6.3%에서 5.1%~6.5%로 상향 조정됐다.

기타경비는 현장 관리비용으로 품셈이나 법령에 의해 산출이 불가능한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등 7개 비목을 포함한 것으로 한국은행이나 대한건설협회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조정된다.

이처럼 올해 제경비율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건설근로자 복지비용 등의 건설공사비 반영폭이 커졌고 현장관리 비용의 공사비 반영도 보다 현실에 가깝도록 조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제경비비율 상향이 공사비 현실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

타경비나 이번에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관리비 등은 아직도 현실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이 같은 항목에 대한 적용기준 상향폭을 확대, 공사비용 산출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제경비 산출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업무,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

정성 검토업무,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 검토업무 등에 적용된다.

조달청은 매년 정부공사의 공사비 책정기준인 제경비율을 조사 발표하고 있으며 원가기준·계산기준을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사원가계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 각종 자재가격 DB, 원가계산 전산프

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시설공사 공사비 책정기준과 원가계산 업무 전문화를 선도해 왔다”고 밝혔다.

또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 등에서 필요시 공사원가 적정성검토를 의뢰해 올 경우 10일 이내에 검토, 통보하고 있으며 지난 해 한 해 동안 약 3,000건, 11조원의 공사비 책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7,000억원(6.4%)의 국가예산을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 제경비율 조정현황

(단위: %)

구분		2006년 적용	2007년 적용	비고
간접노무비	토목공사	9.8~11.2	9.8~11.2	
	건축공사	9.2~11.6	9.2~11.6	
산재보험료		3.4	3.8	노동부고시 2006-41(06.12.29)
국민건강보험료		1.31	1.40	건교부고시[2007-28(07.01.26) 보험요율변동 4.48→4.77%]
퇴직공제부금비	토목공사		1.35	공제부금비인상 2,000원→3,000원
	건축공사		1.42	
기타경비	토목공사	4.8~6.7	5.1~7.1	완성공사원가분석반영 (4.7%↑)
	건축공사	4.9~6.3	5.1~6.5	

### 건설고용보험카드 활성화 추진

#### 노동부, 개방형에서 폐쇄형 변경

**|** 건설고용보험카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사업장 규모별 고용안정 지원금도 책정됐다.

노동부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건설고용보험카드제도

설명회’에서 건설고용보험카드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와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안전지원금은 신고하는 연인원이 200인에서 399인일 경우 월 30만원, 400인에서 699인이면 50

만원, 700인 이상이면 7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신고실적 기간은 월력을 기준으로 하고 공사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사업주에게 유리한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산정한다.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하고 우수사업장과 우수근로자에게는 연 2회에 걸쳐 표창과 경품이 제공된다.

특히 노동부는 건설고용보험카드 사업의 추진·확대를 위해 고정비용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비용을 절감해 경제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우선 기존의 개방형카드를 폐쇄형카드로 변경하고 건설고용보험카드 대량 동시발급기를 도입키로 했다.

또 카드리더기 인증제를 도입해 무상 임대에서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카드발급과 배송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건설고용보험카드시스템의 응답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웹가속기를 도입한다.

아울러 ‘건설고용보험카드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행정서비스 및 절차의 표준화와 공식화를 도모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고용보험카드제도 시범사업 결과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부족으로 그동안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하지만 작년 4월부터 일용근로자도 근로

소득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함에 따라 세원 노출을 우려해 건설고용보험카드의 활용을 꺼렸던 관행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오는 2008년 1월부터 시공참여제도가 폐지되면 제도에 대한 거부감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 장기임대 260만 가구 추가공급

#### 정부, 2017년까지 임대주택펀드 연 7조 조성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260만 가구의 장기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키로 하고 이 가운데 50만 가구는 주공과 토공이 관리하는 ‘임대주택펀드’를 통해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가격의 안정된 기반 위에 향후 부동산정책의 중점을 서민의 주거복지 안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아래 장기 임대주택의 비중을 2012년 15%, 2017년 20%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150만 가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10만 가구 등 26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따라서 당초 2012년까지 185만 가구로 계획됐던 임대주택 비축규모가 230만 가구로 늘어나는 동시에 2017년까지는 340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 기간에 155만 가구의 임대주택이 추가로 공급되는 셈이다.

정부는 우선 연간 7조원 규모의 임대주택펀드를 통해 비축용 장기 임대주택을 연간 5만 가구씩 2017까지 총 50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올해 5,000가구가 건설되는 것을 비롯,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만 가구, 2017년 4만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장기 임대주택의 분양면적은 11~24평인 기존 국민임대주택과는 달리 평균 30평을 기준으로 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키로 했다.

임대주택펀드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10년 뒤 일반에 매각되는데 이에 따른 주택감소분은 2018년 이후 연간 5만 가구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민임대주택은 2012년까지 총 72만 가구를 공급하는 데 이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10만 가구씩 총 50만 가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이 기간에 10년 임대, 전세임대 등도 30만 가구를 추가공급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존 5년 민간임대사업을 10년 임대사업 전환으로 유도키로 했다.

이 경우 2017년까지 약 25만 가구를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건설도 활성화 하고 특히 비축용장기임대와 국민임대 공급 확대에 따라 재정지원 현실화, 재원조달방식의 다양화 등 재원대책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주택 공급 애로에 대비해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확대키로 하고 우선 수도권에서 주공 등의 분양주택 공급물량을 연간 3만 5,000가구에서 최소 5만 가구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시장점검을 통해 민간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택지개발 규제완화, 주공의 민간택지 개발확대 등 공공부문이 즉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택보증, 신용보증기금의 임차자금 보증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택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혼합건설을 통한 사회통합과 임대주택 품질제고 등 사회친화적 임대정책을 추진, 중장기적으로 주택바우처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권오규 재정부 부총리는 “지금은 부동산정책의 중점을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향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주요 선진국의

서민주거정책을 벤치마킹해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공공부문의 주택공급능력은 민간부문의 공급 애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과 민간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량을 강화해 서민주거와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 대금 현금결제 정착 “아직은...”

### 인식 개선 불구 유동성 부담 여전

**[시]** 공능력평가순위 86위의 중견 건설업체인 호반건설은 ‘단 한 장의 어음도 쓰지 않는 기업’으로 통한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목적물 인수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상의 대금지급 기일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아예 거래은행에 기업구매자금 대출 계좌를 개설해놓은 뒤 은행이 자재 납품업체들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나중에 결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 회사 자재팀 관계자는 “자체사

업이든, 도급사업이든, 또는 발주기관이나 시행업체가 현금을 주든 어음을 주든 관계없이 우리는 어음을 주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가끔 50일 만에 현금이 나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20일 만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도 현금결제 우수기업으로 높은 평판을 얻고 있다.

발주처나 주택사업 시행업자가 어음을 주는 경우 예외적으로 어음으로 결제하기도 하지만 이때에도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손해를 감수하고 현금으로 결제한다.

특히 거래업체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 대기업에 대해서는 결제기간을 40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0일로 정해 중소기업을 ‘편애’ 할 만큼 배려하고 있다.

호반건설이나 포스코건설 외에도 현금결제 우수 건설업체를 찾기관 그리 어렵지 않다.

GS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2001년부터 각각 ‘기업구매전용카드제’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를 도입하면서 자재 대금을 모두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있고, 대림산업, 신세계건설, 계룡건설산업 등도 앞다퉈 현금결제에 나선 지 오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재납품 대금이나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있는 건설업체는 전체의 약 2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또한 현금과 어음을 함께 사용하는 상당수 중소건설업체들도

현금지급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많은 건설업체들이 어음을 발행하지 않는 데는 상생협력에 대한 관심이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상생협력정신으로만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호반건설이나 포스코건설은 자금 흐름과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전액 현금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힌다.

시공능력평가순위 30위권에 드는 대형건설업체인 S사 구매담당자는 “초대형건설사 몇 곳과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형 중견 건설사들은 현금보다 어음을 주고 자재를 구매하고 있다”며 “주택미분양 등으로 돈이 묶이는 경우가 많은데 현금으로 자재대금을 주고 나면 유동성 위기가 생기기 쉽다”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가령 자재대금 규모가 큰 철근을 예로 들자면 현금가격보다 어음가격이 톤당 7,000원이나 더 비싼 게 보통이지만 돈이 묶이는 게 싫기 때문에 얹어주면서까지 어음을 쓰고 있다”며 “위생도기나 내외장재 등 납품경쟁이 심한 품목은 웃돈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역시 1군 건설업체인 D사 구매팀장은 “정확히 통계로 잡히지는 않겠지만 아직까지 건설업체들이 현금보다 어음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어음의 만기는 3~4개월짜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나마 많이 짧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1군 D사 구매담당자는 “장기어음으로 결제하려면 연리 7.5% 수준의 할인료를 얹어줘야 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해 현금으로 지급하려면 연리 6%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며 “사실상 별 차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만 좋으면 굳이 어음을 줄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또 “자금흐름이 안 좋으면 때로는 할인료 지급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가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다”며 “다만 공급자 우위의 시장에서 납품업체들이 선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구매품목의 거래규모가 아주 작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현금결제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갈수록 많은 건설업체들이 현금결제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관행 개선에 ‘갈 길이 먼’ 까닭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난과 정책적 지원 미흡, 그리고 현금결제관행이 이미 자리 잡았다는 ‘착각’ 등과 관련 있다.

100% 현금결제를 고집하고 있는 대구의 SD건설 관계자는 “현금결제를 확대하려면 상생협력 정신과 원활한 자금흐름,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단속에만 의존치 말고 건설업체들이 현금결제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표준건축비 하반기부터 현실화

### 건교부, 물가연동 6개월마다 고시

**|** 올해 하반기부터 표준건축비가 물가변동폭을 반영, 6개월 단위로 고시된다.

또 국민임대주택 공급방식이 지역별, 평형별로 다양화되고 주택공급 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된다.

아울러 9월 민간부문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맞춰 민간택지의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용도 적정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주택부문에 있어 같은 내용의 ‘5대 연구용역 발주 계획’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건교부는 ‘표준건축비의 건설공사비지수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 그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중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한다.

건설공사와 연관된 물가 등이 표준건축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건축비의 공사비 지수를 6개월 단위로 고시하기로 한 것.

표준건축비는 지난 1998년 말 원가연동제 폐지 이후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의 분양가 규제를 위해 도입됐지만 물가변동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건설업계

의 비판을 받았다.

6개월 단위로 건설공사비 지수를 반영, 개정고시되는 기본형건축비와 달리 2000년 8월 최초 고시 이후 지금까지 2번만 조정됐고 현 표준건축비도 2004년 9월 고시액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또 '국민임대주택 지역별 수요추정 및 지분취득형 공급방안 연구용역'을 의뢰, 100만가구로 계획된 국민임대주택을 지역별, 평형별로 다각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번 용역에는 특히 토지와 주택을 함께 임대하는 현행 방식뿐 아니라 정치권에서 거론된 토지임대부 주택공급, 환매조건부 주택공급 등의 새로운 방식을 가미하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된다.

건교부는 8월 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곧바로 이들 새로운 기법에 맞는 국민임대주택을 시범적용한 후 확대시행 가능성을 타진키로 했다.

내년부터 주택전산망 개편을 통한 주택공급 모니터링 시스템도 적용된다.

새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공 및 민간 주택사업자가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전산검색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적격당첨자 선별 확인업무가 대폭 간소화될 것 이라는 게 건교부의 기대다.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전산망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일정이 대폭 단축된다는 설명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당정의 오는 9월 민간부문 분양가 상한제 적용방침에 맞춰 민간택지의 특성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용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기 위한 용역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5월까지 연구용역을 의뢰, 완료한 후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 적용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마이너스 옵션제 시행시 기본형건축비에서 마이너스 옵션사항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한다.

건교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양가상한제 책정을 통해 민간부문 분양가 규제로 인한 주택공급 축소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교부는 나아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전월세 부담완화를 위한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택바우처(Voucher)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임차료를 쿠폰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서구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제도다.

그러나 건교부의 이 같은 주택부문 제도개선 용역계획에 대한 주택업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임대주택 공사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표준건축비 현실화 방침은 환영할 만 하지만 최근 임대주택업계의 더 큰 현안인 임대보증 의무화에 대한 완충장치가 빠졌다는 것.

임대보증금을 건설업체 75%, 임차인 25%씩 부담하지만 실질적으로

는 건설업체가 전액 부담하고 임차료에 보증금이 포함돼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임차인은 임대료 상승으로, 건설업체는 비용부담 증가로 모두 고통을 겪고 있다"며 "분양전환도 깎간해졌을 뿐 아니라 종부세 부담 때문에 그마저 여의치 않은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주택업계의 생사가 걸린 최대현안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완충할 수 있는 장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용 적정화만으로는 민간업계의 타격과 이로 인한 주택공급 감소상태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민간부문 분양가상한제 도입의 최대 선결조건은 택지비 현실화"라며 "시세의 70~80% 선인 감정가격으로 택지비를 산정하려는 정부의 미온적 방침만으로는 민간주택 건설위축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수도권전철 10곳에 스크린도어

### 철도공, 민간 사업자 공모 나서

**한** 국철도공사가 운영 중인 수도권 광역전철 구간에 대한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철도공사는 분당선·경부선·경인선 수도권전철 10개역에 대한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및 운영을 맡을 사업자모집 공고를 내고 철도공사 서울 사옥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치대상역은 혼잡도, 사고발생률, 공기질, 광고수익성 등 역별 특성을 검토해 분당선 선릉·서현역, 경부선 용산·영등포·신도림·구로·가산디지털단지·안양·수원역, 경인선 부평역 등 10개역이 우선 선정됐다.

설치사양은 수동운전취급방식(ATS, ATC) 및 향후 향상된 시스템으로 개량할 경우 연동이 가능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직접 부담해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스크린도어에 대한 광고수익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신청자는 철도공사에서 제시한 공모지침서와 시방서를 기초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며 공사는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철도공사는 최대한 많은 민간업체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신청업체의 자격기준을 완화했으며 100%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승호 광역사업본부장은 “이번 스크린도어 설치사업은 승객안전 확

보와 승강장 환경개선 효과는 물론 국가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건설교통부 및 철도시설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스크린도어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공사는 수도권전철 구간에 대한 조속한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스크린도어추진팀(TF)을 구성, 운영 중이다.

## 위험방지계획서 작성방법 바뀐다

### 재해형태별 → 작업공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방법이 재해 형태별에서 작업 공종별로 변경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23일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을 오는 3월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재해 형태별 작성에서 작업 공종별 작성으로 바뀌 제출토록 개선됐다.

공단은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작성편의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 새로 변경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모델을 전국에 있는 건설업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모델은 제출대상인 5개 공사별로 현장 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책자 형태로 제작됐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항목인 공사개요,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작업환경조성계획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

특히 해당 현장의 작업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위험의 크기를 평가하고 위험수준을 제거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기법이 상세하게 수록돼 있다.

공사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모델(5종)은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지간길이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터널건설 등의 공사 △댐 건설 등의 공사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등이다.

공단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모델 보급과 함께 공단 산하기관별로 지역별 건설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 및 작성기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작성모델 자료 보급이나 설명회 일정과 관련된 문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도원 건설안전팀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osha.net), 공단본부 건설안전실(032-5100-624~8)로 문의하면 된다. ☎